

# 靑 ‘임·박·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고민 깊어지는 민주

〈해속〉 〈준영〉 〈형욱〉

### 임명강행 수순, 시간 벌기 분석 “당 지도부 뚜렷한 결론 못낸다” 민주 재선의원 지도부에 쓴소리 조웅천 “당 중심으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

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여권내 내전으로 비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관련,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제로 ‘낙

마’ 시킬 생각이 없다는 뜻을 피력한 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들에게 표면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나,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최소 1명 정도는 낙마시켜야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재선의원들은 11일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병욱 의원은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쉬웠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고 조웅천 의원은 “마지막 1년이

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장관 임명을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안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송영길 대표의 채신 의지와 ‘진문(진문재인)’ 진영 간의 관계 설정의 시험대로 비칠 수 있어 폭발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물 밑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약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부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민구 원내대변인,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 외무부, 5·18 당시 해외 동향 파악 지시

### 윤영덕 ‘광주사태 중남미 반응’ 입수

5·18 민주화운동 직후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핀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입수한 ‘1980. 5.18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반응’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가 1980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남미 재외공관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각국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6월 3일 외무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공관장에게 최근 국내사태(광주민주화운동)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등 국내정세 추이에 대한 해당 국가의 반응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남미 재외공관은 ▲각계반응(정부·의회·언론·경제) ▲교민 및 반한단체 동태 ▲북한의 책동상황 ▲대사관의 조치사항 ▲효율적 홍보 등 대책에 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외무부에 보고했다.



당시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유력 언론은 “국제정치상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를 복귀가 악용할 여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과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가 북괴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아르헨티나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대사관이 현지 언론을 접촉해 이뤄낸 성과”로 보고했다. 윤 의원은 “1980년은 냉전체제가 강고했던 시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신군부의 권력 찬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외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외곽에 앞장섰다”면서 “당시 외무부와 각국 대사관이 나서 신군부 권력 장악의 정당성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5·18 북한 개입설’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전파 내지 방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 국민의힘, 새 대표 선출 전대 다음달 11일 연다

### 이달 30일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 ‘서진정책’ 호남 끌어안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6월 11일 개최한다.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 마감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오는 30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당 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 호남에 진정성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도부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주자들이 1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컷오프(예비경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경선 룰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당 내에서는 초선 그룹을 중심으로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 대표 경선의 여론조사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50~100%로 높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30대인 김재섭 당 비상대책위원과 전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등은 여론조사 비중을 50%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일이 촉박해 당헌·당규 개정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며 “토의 내용을 전달하면 비대위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전대 입후보를 위한 기탁금 규모도 결정했다. 당 대표 후보의 경우 입후보와 함께 4000만 원을 내야 한다. 본 경선까지 치르면 4000만 원을 더해 총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오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 당 지도부와 초선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광주·전남을 방문한데 이은 것으로 ‘서진정책’을 통한 호남 끌어안기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소병철 ‘산재 노동자 재해 자료 업주에 요청’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절차상 노동자와 사업주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한 층 더 대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최근에도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재해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정보와 자료 접근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면서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상가매매 (상무/치구)	신축원룸(매매)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4억9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li> <li>☑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li> <li>☑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li> </ul>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li> <li>☑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향 10분 소요</li> </ul>
010-6670-9800	010-4667-9820